

오피니언

금남로에서

정재현



“빅딜은 경상도 기업을 죽이기 위해 추진됐다”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면 연기는 공장이 별로 없는데, 호남고속도로를 달리면 모든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난다” “대구·경북은 연일 건설회사가 부도나는 데 광주·전남에는 덩프트럭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호황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호남에서 대통령이 나온 ‘국민의 정부’ 초창기에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나온 유언비어(流言蜚語)다.

지역 간관기업 줄줄이 몰락

“최근 기업 구조조정은 ‘호남지역 죽이기’다” “2~3년 새 호남 재계가 속대밭이 되고 있다” “호남 인재 및 기업의 씨가 말라 간다” “광주·전남은 이렇다 무인도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호남지역에서 떠돌고 있는 흉흉한 설(說)들이다. 국민의 정부 시절 영남지역과 최근 호남지역에서의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되는 불황, 정치·경제적인 면에서의 상대적 박탈감과 광국병인 지역감정이 결합해 상승

작용을 부른 억측(?)일 것이다. 여기에 정치적 이해를 위해 특정 지역·정파의 정치인들이 부추긴 측면도 있을 수 있다. 결국 유언비어가 대부분 허무맹랑한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확산기류를 타는 것은 경제난과 정치적 소외에 따른 불만의 탈출구가 마련되지 않기 때문이다.

왜 또 ‘호남 죽이기’ 망령인가

하지만, 지금 광주·전남이 처한 상황은 ‘호남기업 죽이기’를 단순히 유언비어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절망적이다. 실제로 지역에 연고하고 있는 간관기업은 최근 2~3년 사이에 건설, 금융, 제조업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이미 도산했거나 휘청거리고 있다. 심지어 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기대됐던 조선클러스터 사업은 품비박산이 났고, 지역민의 자존심이자 호남기업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는 금호아시아나그룹마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호남기업의 수난사는 군사정권시절부

터 시작됐다. 3공과 5공 시절에 말 그대로는 날 느닷없이 공중분해된 삼삼소주, 울산그룹, 명성그룹 등등이 그 대표적 예다. 이들 기업들이 경제적 이유보다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몰락했다는 것은 훗날 여러 증인이 뒷받침하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지역기업의 몰락은 지역 경제에 직격탄을 날린다. 가뜰이나 취약한 경제구조에서 그나마 몇 안 되는 기업 의 잇단 도산은 지역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지역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호남 낙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수십 년째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작금의 지역 기업의 위기는 기업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무리한 사업 확장 등 방만한 경영, 편법과 불법이 난무한 부도덕한 영업, 그리고 ‘까리까리’ 인맥 형성 등 주먹구구식 경영이 화(禍)를 부른 것이다. 비리기업과 기업인은 연고를 가리지 않고 법에 따라 엄하게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그릇된 경영으로 국가와 지역, 국민과 지역민에 엄청난 피해를 준 기업인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범죄 국가의 기본이다. 하지만,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공정해야 한다. 지역이나 정권과 의 친소(親疏)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공평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납득한다. 불필요한 유언비어나 억측으로 인한 국민 분열과 지역 갈등·대립을 차단할 수 있다.

기업 수사 공정·신중해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중해야 한다. 특정 기업과 이와 관련된 정치인을 잡겠다고 지역경제를 파탄 내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최소한 지역경제만큼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 지금 광주·전남은 희망이 없다. 기업은 무너지고, 각종 대규모 국책사업은 제자리 걸음이다. 그렇다고 지역 정치인이 희망을 주는 것도 아니다. 암울한 지역현실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무능과 무기력으로 일관하고 있다. “광주·전남에 대한민국의 ‘외판심’이 되고 있다”는 말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역 민심이 들끓을 수밖에 없다. ‘호남 죽이기’는 가능하지도 있을 수도 없다. 그럼에도 왜 이런 말이 난무하고 있는지 현 정부는 곰곰이보아야 할 것이다. ‘공정 사법’에서는 유언비어가 불 붙일 곳이 없는 법이다. <논설실장> jhjung@kwangju.co.kr

시설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 이대론 안 된다

‘친환경농업 1번지’인 전남에서 친환경 농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간 인증기관의 난립으로 인증검사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받았다가 취소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어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지난해 전남지역 9만7000여 친환경 인증 농가들을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1900여 농가가 친환경으로 재배를 하지 않다가 적발돼 인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이는 농가의 부주의 탓도 있지만 인증기관들이 철저한 검증보다는 돈 벌이에 급급해 친환경 인증을 남발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전남의 경우 민간 인증기관이 농산물품질관리원 외에 17개소에 달해 전국 71개소의 23.9%를 차지한다. 이 같은 난립으로 인증기관이 충분한 심사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부실 인증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오정 사법’에서는 유언비어가 불 붙일 곳이 없는 법이다.

인증기관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대대적인 정비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양오염을 막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농가의 수입을 늘리는 다목적 카드로 도입한 친환경 인증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쌓이다 보면 결국 친환경 농산물 전체가 불신받는 상황이 올 수 있고, 결국 그 피해는 농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인증기관의 신뢰에 위기가 오면 친환경농업 전체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인증제도의 대대적인 수습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당초 취지를 살려야 한다. 현 단계에서 부실인증이나 불법 인증을 단속하는 수준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다. 무엇보다 인증기관 간 통제합과 장비 지원 등 물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는 인증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아 친환경 인증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결코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

‘홍물’ 된 광주 지정 벽보판 정비 서둘러라

광주지역 도심 곳곳에 설치된 자치구의 지정벽보판이 오히려 도시경관을 해치는 홍물로 전락하고 있다고 한다. 벽보판 자체가 관리가 제대로 안 돼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는가 하면 부차물도 성인 유흥업소의 선전포스터 등 제멋대로서 시민들의 눈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에는 5개 자치구에 총 242곳의 379개 지정벽보판이 설치돼 있다. 지정벽보판은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로변이나 출근길, 통학로 등 통행이 잦은 곳에 설치돼 있다. 따라서 지정벽보판은 지역 이미지는 물론 주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광주시의 지정벽보판 가운데 상당수는 전혀 관리가 안 돼 높이 슬고 벽보판이 훼손된 채 방치돼 있다. 또한 투명 덮개까지 설치돼 있지 않아 광고 포스터가 지저분하게 덧씌워져 있는 상태로 부착돼 있다. 특히 지정벽보판에는 나이트클럽 등 성인유흥업소의 선

전적인 포스터가 대부분이어서 청소년 교육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요즘 거리 간판은 단순한 상업적 메시지를 벗어나서 도시경관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지역 문화, 역사를 담아내는 문화 콘텐츠이자, 소통의 방편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따라서 광주가 문화 및 국제도시를 지향한다면 홍물로 전락한 지정벽보판부터 정비해야 한다. 더욱이 광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자처하고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앞두고 있지 않은가. 문화중심의 국제도시로의 도약, 도시경관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성과 통일성, 유기적 조화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공간 문화 조성이 필수적이다. 지정벽보판의 보수·교체와 내용물의 제한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지정벽보판의 정비가 아무리 명분이 뚜렷하다고 해도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은펜칼럼



임명재

‘국격을 높이기 위해’, ‘국격이란게 있는 데’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된다. 이전에는 생소했는데, 내 기억으로는 아마도 G20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게 가 되었다고 표현한 뒤로 자주 쓰이는 것 같다.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으니 나라에도 국격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인격이라는 것은 인간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 있고 나라 또한 스스로 인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정진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인격을 유지하고 높이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도덕은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거나 부를 쌓

부패한 국격

았거나 학식이 높더라도 도덕적인 문제가 노출된다면 사회적으로 더 이상 존경받기 힘들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 나라의 지도자의 품성이나 부패 정도에 따라 그 나라의 국격이 결정된다고 생각 한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지도자는 국민의 의식 수준이 그대로 반영되어 선출되는 것이고 부패지수는 부패행위에 대한 그 나라 구성원들의 수용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국격에서 이 두 가지는 매우 결정적인 요소이다. 일본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이지만 국제적으로 존경받지 못하고, 미국이 강력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워하는 나라가 더 많은 현실은 이를 증명한다. 도덕적인 면에서 살펴본 우리의 국격은 참담할 지경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우리나라 장관들의 도덕적인 수준은 검증과정에서 수많은 불법과 탈법 그리고 불법에 드러난 일들에 연관되었음이 밝혀지고, 가장 지수가 적은 사람이 임명될 정도이다. 심지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도 역시 임명된다. 자신의 입신영달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자들이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된다면 과연 그들이 공평정대한 행정을 펼칠 수 있을까? 밝혀지지 않을 뿐 그들은 지금까지의 습관을 버리지 못할 것이다. 최근에는 국법에 관련된 비리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밥값을 청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전차의 포신이 갈라지고 엔진의 핵심 부품이 불량해서 전차가 멈추는 일이 허다하다고 하고, 연평해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질책했던 자주포도 근본적인 원인은 비리에 있었다고 한다. 도대체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도 북한과의 일전을 불사해야 된다고 하는 정치인들의 뇌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베트남의 폐망원인이 바로 이러한 부패에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 안보를 해치는 이들이 발본색원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일까? 우리가 34개의 회원국이 있는 OECD국가 되었다고 하는데 부패지수로 본다면 어림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고

스페인에서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길을 묻다



손재홍

광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수년째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화의 세기라고 일컬어지는 21세기를 맞아 방향은 아주 잘 잡았다고 본다. 구 도청 부지에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건물이 지어진다고 해서 저절로 문화도시가 될까? 우리의 고민은 바로 이 때문이다. 문제는, 외형이 아니라 문화콘텐츠라는 점에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그 대안을 찾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는 데 있다. 얼마 전 시의회 문화수도특별위원회 위원

들과 스페인으로 선진지 연수를 다녀왔다. 연수단에게는 특히 문화 유적지에 대한 보존 관리와 문화예술의 관광자원화 등이 주요 관심사였다. 한때 무적함대를 앞세워 영국과 자원을 겨루기도 했던 스페인은 현대에 들어 내전을 치르면서 유럽의 변방으로 밀려나기도 했지만, 지금은 풍부한 문화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세계인을 유인하고 있다. 중세 도시인 톨레도와 세고비아를 원형상태로 보존하고 있어 세계적인 감탄을 자아낸다. 그중에서 특별히 필자가 눈여겨 본 것은 톨레도의 산토토메 성당에 있는 그림 한점(엘 그레코의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과, 8년마다 열리는 마드리드 시내에 있는 마요르광장의 벽화 공모 이벤트였다. 별개의 사안이었지만 광주의 현실에 비추

어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컸다. 산토토메 성당의 그림 한점을 보기 위해 연간 100만 명이 넘는 유류 관람객이 온다는 사실에 문화예술이 지닌 저력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필자가 착안한 것은 그 그림이 간직한 풍부한 이야기 구조였다. 즉 그림 속의 인물들, 그에 얽힌 사건 등을 통해 관람객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회화적 가치를 한층 높인다는 점이었다. 막연하게 생각되던 스토리텔링의 힘을 실제로 엿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광주는 광주학생독립운동과 5·18로 상징되는 의향으로서의 유산과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즉 자유에 대한 갈망, 투쟁, 성취로 이어지는 차별화된 풍부한 이야기 구조를 갖추고 있는 도시인 것이다. 필자는 이를 회화나 조각 등의 예술로 승

화한다면 충분한 문화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과정도 마요르광장의 벽화 공모처럼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참여하게 한다면, 그 자체로도 훌륭한 문화이벤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사람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예술로 승화된 자유의 정신’은 콘텐츠를 고민하는 문화중심도시의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우리는 지금 문화 창조력이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문화강국이 곧 경제강국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비록 스페인의 톨레도 같은 중세 도시는 아니지만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역사적, 정신적 자산을 갖고 있다. 문화중심도시 콘텐츠 부재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차근차근 구체적인 대안을 찾으면 된다. 훨씬 많은 세계 사람들이 우리 광주로 와서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진정한 문화도시 광주’를 꿈꿔야 한다. <광주시의원·광주시의회 문화수도 특별위원장>

개편이라는 표현을 안 써도 된다. 정부 중앙부처명중 하나인 ‘교육인적자원부’도 ‘교육인력자원부’라고 쓰면 훨씬 더 자연스러웠을 것을 굳이 ‘인적자원부’라고 써왔다. 우리가 한자어 뒤에 많이 쓰는 ‘직’은 우리말의 조사 ‘의’, 영어의 ‘ic’, 일본어의 ‘의’에 해당하는 말이다. 심지어 ‘마음적으로’라고 우리말에 붙여 쓰는 사람도 있다. 이런 표현들 모두다 어색하고 작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쓰기에, 듣기에도 별로 자연스럽지 못하다. 우리말에는 ‘~다운’ ‘~스러운’이란 말이 더 자연스럽다. <윤현숙·순천시 안동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이메일 opinion@kwangju.co.kr

無等鼓 (No Equal Drum) advertisement featuring a cartoon character and text about art exhibitions and critiques.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G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 and its English edition.

우리 말 속 일본말 잔해 여전히 많다 우리말 속에는 일제의 잔재가 여전히 많다. 예를 들면 가차호호 → 집집마다, 가건물 → 임시건물, 가고 → 임시다려, 가급적 → 될 수 있는 대로, 가두 데모 → 길거리 시위, 가면 → 탈, 가명 → 가짜이름, 각도 → 눈금, 간수 → 교도관, 갭 → 틈, 견본 → 본보기 등 이루어 헤아릴 수 없다. 이런 단어들은 그래도 점차 고쳐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00적’이라는 표현은 여

전히 많이 쓰이고 있다. 예를 들면 “정부는 공기업도 민영화하고 방만한 구조를 정비한다면서 ‘인적 쇄신’을 단행할 계획이다”와 같은 문장이다. 이때 ‘인적 쇄신’ ‘인적 청산’ ‘인적 개편’ 등은 ‘적(的)’이라는 접미사가 들어간 용어다. 이 보다는 ‘인사 쇄신’ ‘인사 교체’ ‘조직 개편’이 더 좋은 용어이다. 조직개편도 어차피 인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굳이 인적